

보사부 예산안, 시안과 확정안은 이란성 쌍둥인가

93년도 보사부 예산규모가 1조6천6백59억3천2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돼 지난 1월 1일부터 예산집행에 들어갔다.

국회는 지난 11월 20일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 예·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예산안을 최종확정 통과시킴으로써 오랜기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부 세출예산 책정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보사부예산 최종 확정돼

이번에 확정된 93년도 정부예산은 총38억5백억원 규모로 계속유년 한해동안 정부 각부처는 배정된 예산 규모내에서 고유사업을 추진케된다.

이중 사회보장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다는 보건사회부 소요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중 45%을 차지하는 1조6천6백59억3천2백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92년도 보사부 예산이었던 1조5천4백62억원보다 고작 1천1백96억9천9백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전년도에 비해 7.7%만이 증가한 것. 따라서 보

사부는 올해 추진키로 계획했던 일부 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사부는 93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밝힌 기본방침에서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그리고 의료보장에 따른 소요재정을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주장했던 것.

국민복지 및 건강증진에 주력방침(?)

이에따라 보사부는 암, 의료재활, 노인치매에 대한 투자확대, 응급의료체계 확립, 민간병원 장비지원, 의료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위한 예산반영, 신약개발과 마약관리사업 생활화, 인구대책사업중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지원을 축소하고 모자보건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을 1천2백3천3백6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의료보장부분은 지역의료보험 재정지원과 공·교 의료보험 정부부담금지원 및 한방의료보호 신규사업실시를 위한 총예산액은 9천5백62억7천6백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의정사업 예산안도 지난 92년도에 비해 6.6%가 증가된 4백22억4천8백만원으로 책정. 보건소등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기능 강화와 응급환자 정보센터 녹음장치등 기능보강 추진, 민간병원에 대한 차관장비지원, 원폭피해자 복지센터 건립지원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정신질환 및 특수질환 관리를 위해 자폐증환자 치료센터, 5백병상규모의 국립암센터 건립, 1백60여명의 혈우병환자 투약지원, 건강관리협회, 성인병 예방협회등을 통한 성인병예방 홍보사업지원등에는 전년도 대비 9.8% 감소된 2백39억1천5백만원을 책정해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93년도 보사부 예산안은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던 기본 입장과

사회보장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보건사회부 소요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중 45%를 차지하는 1조6천6백59억3천2백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92년도 보사부 예산이었던 1조5천4백62억원 보다 고작 1천1백96억9천9백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전년도에 비해 7.7%만이 증가한 것. 따라서 보사부는 올해 추진키로 계획했던 일부 사업의 조정이 불가피,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는 달리 의료보험분야만 이례적으로 증폭돼 초기 계획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보사당국은 부득이 응급의료체계 등 일부 사업규모를 부분적으로 축소 또는 수정해야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로써 보사부는 사업실현에 토대가 될 예산편성에 따른 기본 방향조차 제대로 실행치 못한다는 비난을 면치어렵게 되었으며 당분간 이에따른 여파로 보사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아진다.

기대와 판이한 예산확정안

보사부가 93년도 소요예산으로 애당초 상정했던 예산안은 2조5천7백61억1천8백만원으로 이미 경제기획원 조정과정에서 35.43%라는 큰 폭으로 삭감을 당했으며 이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결국 이번과 같은 증감폭으로 조정될 것이 뻔하다는 추측을 해왔던게 사실이다.

결국 예상했던대로 보사부는 93년도 예산안을 전년도에 비해 7.6%증액한 1조6천6백34억3백

만원으로 확정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고 의결과정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65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교 정부부담 보험료 정산분 40억원이 삭감돼 지난해에 비해 25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는 선에서 귀결되었다.

93년도에 증액된 65억여원의 세출예산내역은 수입식품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에 39억5천4백만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 모자가정실업학교학비 16억6천4백만원, 3개소 복지회관 설치비 9천6백만원, 지체장애자 복지회 지원비로 5백만원이다. 이들 증액분도 예결소위원회 위원 1~2명의 활약으로 간신히 따낼 수 있었다는 후문이 있어 예산편성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보사부가 그동안 중점사업으로 표방해온 저소득층 복지 향상부분인 생활보호예산은 비록 정부안보다 9억원이 증액되긴했으나 당초요구액인 4천4백77억원의 절반인 2천6백86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때 올해 보사부 예산 평균 증가율인 7.7%에 턱없이 밑도는 2.9%로 보사부의 역점사업 실행



의지조차 의심케한다.

의료보험예산안 큰폭 증가

이와달리 의료보험예산은 타 분야에 비해 5.3%라는 큰폭의 증가를 하고있어 의료계내부에서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포함하는 의료보장이 이번 총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로 따라서 의료보험분야의 예산확장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사업이 상대적 축소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는 것.

그동안 보사부의 전체예산중 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90년도에는 4천4백57억원으로 38.7%를 차지했으며 91년 6천7백61억원으로 46.2%, 92년도에는 6천9백40억원 44.9%였고, 올해인 93년엔 공무원·교직원 정부부

담 보험료 정산분인 40억원이 삭감, 7천3백12억원으로 43.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보건 및 위생, 의정·약정, 인구대책등 보건의료분야의 예산은 90년 1천2백79억원, 91년 1천3백10억원이었고 92년도에 1천2백81억원, 올해인 93년도엔 수입식품검사기능강화로 인해 39억5천만원이 증액된 1천2백73억원에 불과하다. 이들은 비중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은 커녕 91년부터는 해마다 그나마 있던 책정액조차 축소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어 어느 한분야에 집중치않는 고른 정책 입안과 실행이 아쉬운 실정이다.

무사안일에서 벗어난 효율적운영 시급

어쨌든 93년도 보사부 예산안은 확정돼 새해를 맞아 집행을 시작했고 이제 남은것은 살림을 맡은 주무관청인 보사부가 병폐인 권위주의와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책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 높은 성과를 올리기를 기대할 뿐이다.

◇보사부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

(백만원)

구 분	'92	'93안	증·감	증·감(%)
기 본 적 경 비	74,181	84,878	10,697	14.
사 업 비	1,472,052	1,581,054	109,002	4
< 사 회 분 야 >	456,425	501,464	45,039	7.4
○ 생 활 보 호	261,020	268,666	7,646	9.9
○ 사 회 복 지 서 비 스	182,757	219,042	36,285	2.9
○ 국 민 연 금	12,648	13,756	1,108	19.
< 보 건 의 료 >	128,163	127,314	-849	9
○ 보 건 및 위 생	63,020	63,229	209	8.8
○ 의 정 약 정	49,856	49,920	64	-0.
○ 인 구 대 책	15,287	14,165	-1,122	6
< 의 료 보 장 >	887,464	952,276	64,812	0.3
○ 의 료 보 험	694,099	731,255	37,156	0.1
○ 의 료 보 호	193,365	221,021	27,656	-7.
계	1,546,233	1,665,932	119,699	7.7

예산안의 경우처럼 예비시안과 확정안이 차별화되는 일이 실제 사업집행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보사부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임에 분명하며 정책사업을 실행하는 최소한의 단위그룹인 나 개인부터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계유년인 1993년은 문민정치의 원년으로 사회 각분야에서 다양한 변화와 개혁이 폭넓게 요구되고 있다. 보건의료부문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이에따라 보사부도 살아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올

예산안의 경우처럼 예비시안과 확정안이 차별화되는 일이 실제 사업집행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보사부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임에 분명하다.

한해동안 추진할 10대 역점사업을 선정, 강력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염병예방활동 강화, △정신병 및 특수질환 치료기반의 확충, △식품의 품질보증과 좋은 식단체의 확대, △의료서비스의 향상,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대책 강화, △보육사업 및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의료보장과 연금제도의 발전 △사회복지 봉사사업의 확충등이 그것으로 향후 실행결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閱>